

광주시 區간 경계조정 논의 본격화

동구 인구, 북구의 25%... 불균형 극심

동구, 위원회 구성 풍향·두암3동 편입 추진 건강센터 건립 지원책 마련 주민 설득 나서

급속한 도심공동화에 돌고 돌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구간 경계조정' 문제가 최근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간 경계 조정의 필요성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구간 경계조정 급부상=경계조정의 필요성에 5개 구가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가 줄고 있는 동구와 남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는 주민들의 반대와 선거를 염두에 둔 지방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구간 격차는 구별 행정서비스 불균형을 비롯한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1인당 인구 수는 5개구 평균이 394명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는 510명에 달한다. 하지만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는 평균 치의 절반, 북구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환경미화원 1인당 인구 수도 ▲동구 724명 ▲5개구 평균 1천407명 ▲북구 1천711명으로 불균형이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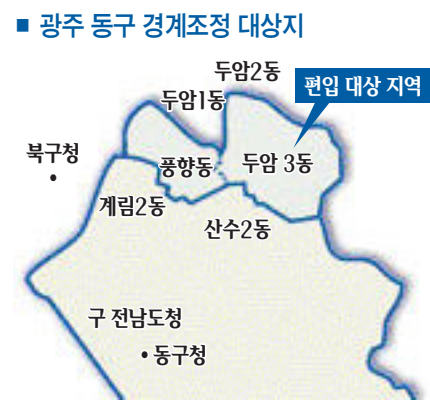
◇구간 경계조정 관련 시와 각 구의 입장=동구는 구의 사활을 걸고 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구는 지난 2003년까지 서구를 상대로 경계조정을 원했으나

이후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광주시도 동구와 북구를 상대로 어떤 형태로든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구는 지난 1980년 북구 개칭 당시 폐지된 북구 풍향동·두암3동을 편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금도 공동화군으로 남아 있다. 해당지역 주민 3만2천여명을 끌어들이면 14만여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인구 수에 따라 배정되는 교부금과 각종 세수증대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동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편입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 아래 초현대식 국민체육센터와 주민건강증진센터(보건지소) 건립 등 편입 주민 지원책까지 마련했다.

북구는 경계조정에는 공감하지만 민선시대에 자신들이 먼저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구가 해당 주민들을 설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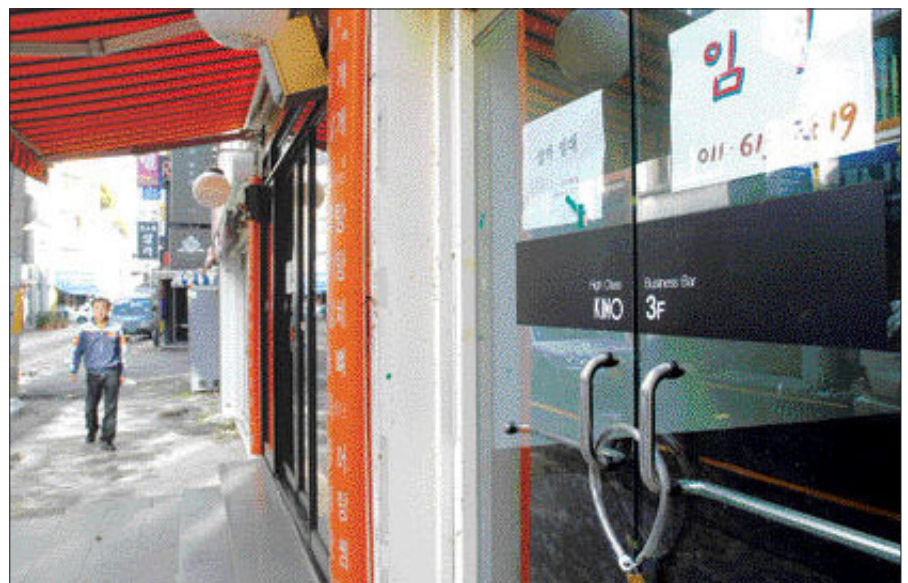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남구는 지난 2000년부터 서구 풍암·매월동 일부지역(1만세대, 인구 3만5천명)을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서구의 거부로 중단됐다. 대신 2008년 준공 예정인 진월택지지구(기대인구 5천명)와 2010년 준공 예정인 효천 1,2지구(기대인구 3만명) 개발에 전력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2001년 경계조정 실패=광주시는 상무·풍암·금호·문흥지구 등 외곽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심화된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지난 2001년 구간 경계조정에 나섰다.

시는 당시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경계조정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통해 ▲동구와 남구 통합 및 북구 분할 ▲북구와 서구의 일부를 동구와 남구에 각각 편입 ▲북구의 풍향동, 두암1·2·3동을 동구로 편입 ▲북구의 풍향·중흥동 일부까지를 동구로, 북구의 동림동 일부를 서구에 편입하는 4개 조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면적 축소가 예상되는 자치구가 크게 반발함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도 주소 변화와 행정구역 이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내 도심공동화가 심해져 동구지역이 날로 위축되고 있다. 특히 전남도청 이전 이후 도청 주변 상가에는 문을 닫은 점포들이 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인구 감소가 가장 심한 동구가 먼저 칼을 빼들었다. 동구는 지난 2004년부터 구의 운명을 걸고 경계조정에 나서 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 대상지인 북구 풍향동과 두암3동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5·31선거 후 동구와 남구를 제외한 3개 구의 단체장이 바뀌면서 경계조정 논의에 파란불이 켜졌다. 특히 동구의 경계조정 대상지인 북구가 예전과 달리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간 경계조정 왜 필요한가=자치구간 극심한 인구격차로 구간 재정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 초부터 동구와 남구의 인구는 꾸준히 줄었다. 특히 광주의 중심구였던 동구는 1992년 17만2천명에서 2006년 말 현재 11만1천여명으로, 한 달 평균 300명이상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 반면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서구와 광산구는 5년 전보다 각각 8만, 13만여명이 늘었다.

'김흥주 로비' 정치권으로

한광옥 前비서실장 곧 소환...여야 정치인 조사 불가피

김흥주(58·구속) 삼주산업(옛 그레이스 백화점) 회장을 둘러싼 각종 로비의혹이 금융감독원을 넘어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수사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한광옥(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씨에게 사무실 보증금 등의 대납을 요구한 혐의를 잡고 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중록 금감원 부원장,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을 구속하는 등 주로 금융 관계 기관에 대한 김씨의 로비활동을 파헤쳐왔던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제는 정치권 인사들을 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한 전 실장은 1999년 정계에 복귀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사무실을 마련해주기 위해 김씨에게 마포구 도화동 모빌링 50

평 규모 사무실에 대한 여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에 대한 출금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다. 주임검사가 한씨를 소환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한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정·관계 고위인사와 친분을 다지는 목적으로 조직한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모임'에는 한 전 실장 외에도 여권 인사인 K씨, 야당 인사인 K·M씨와 구 여권의 P씨 등 유력 정치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또 정계 인사뿐 아니라 '김흥주 로비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꾸준히 이름이 오르

내리던 이우성 전 국제청장과 이근영 전 금감원장도 9일과 10일 차례로 소환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진상 규명에 나섰다.

이 전 청장은 국장 시절이던 2001년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 당시 국제청 과장, 솔집 업자로 보이는 사람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국무총리실 안행감찰반에 적발되자 김씨를 통해 감찰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2001년 초 김중록(58·구속) 금감원 부원장에게 김씨를 소개해 김씨의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작업을 도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이들의 진술을 통해 김씨의 로비와 고위층 인맥 등을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특별기고

이정록



지역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하 광전연)이 심한 혼돈에 빠졌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전연의 분리를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고 실천전략의 도출을 위해 고민해야 할 광전연의 연구능력이 혼돈상태에 빠진 것은 지역발전에 심히 부정적이다. 특히 지역발전에 관한 각종 선거공약이 난무할 대신이 치러질 올해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전연의 분리를 공식화하면서 제시한 이유를 보면, 시대착오적, 행정편의적, 지역이기주의적 행태를 보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다. 밀실에서 연구원의 분리를 결정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들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라 못해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지역개발방식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패러다임이 '지역간 협력과 제휴'다. 과거에는 각종 개발계획을 행정 구역 내로 한정해 수립하고 시행했다. 인접한 지역을 경쟁의 상대로 생각했고, 인접지역의 성공을 곧 자기 지역의 실패로 간주했다.

광전발연 분리, 相生 깨는가

그러나 오늘날에는 변화가 생겼다. 인접한 지역의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행정 구역의 경계를 넘어 광역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공동 투자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여러 지역이 서로 협력하고 제휴한다. '모든 지역이 승리하는 경쟁', '승리하기 위한 지역간 협력과 제휴'로 개발방식의 사고가 바뀐 것이다.

지역간 협력과 제휴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지역간 제휴와 협력을 통해 도시관리 및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행정구역의 통합과 연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오는 2018년을 목표로 규슈와 오키나와 등 8개 현을 합병해 '규슈자치주'로 만들려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행정구역을 탈피한 광역권 개발방식을 도입했다. 시·도간 협력과 제휴는 필수적이고, 작게는 시·군급 행정구역간 통합과 연계도 활발하다. 광주-목포권,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이 좋은 사례다.

그런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실망스럽게도 이같은 지역개발방식의 패러다임과 정반대의 길로 치닫는 결정을 내

렸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초월한 지역발전의 비전수립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시행과정에 인접한 지자체와 협력과 제휴를 강조하는 대세를 역행한 것이다.

광주와 전남의 '한 뿌리론'을 강조할 필요까지도 없다. 기실 광주와 전남은 경제적·기능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문화와 관광, 도시행정과 농촌행정, 제조업과 농수산업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단지 중심지와 배후지 체계를 형성한 하나의 광역경제권 내에서 공간적으로 분업화된 형태일 뿐이다.

경제적·기능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공간을 하나로 묶은 광역권 개발에서 인접한 지역과의 협력과 제휴는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다. 하물며 역사적·경제적·기능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광주와 전남의 협력과 제휴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광주와 전남이 행정구역을 초월해 광역개발을 시행해도 부족한 상

황이다.

그렇다면, 광전연이 광주와 전남의 연구원으로 분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과는 뻔하다. 나주의 공동혁신도시와 같은 두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게다가 광주대도시권 개발계획을 놓고 광주와 전남이 소모적인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자기모순에 빠져서 자멸할 프로젝트가 수없이 양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두 지역이 윈윈(win-win)할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의 국가지원은 요원해 질 것이 분명하다.

광전연의 분리는 지역개발방식의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은 결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충실한 견마(犬馬)의 역할을 수행하는 싱크탱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광전연의 분리는 미친 것이다.

지역이기주의와 행정편의적 발상에 사로잡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박광대시장과 박준영지사에 촉구한다.

(전남대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광주 ↔ 해남도 천년기 휴향

제100주년 개원기념의 의미를 담아 **해남 100년**

해남도여행 마지막 찬스

해남도여행 패키지	1박2일	4인	₩799,000
· 1박2일 해남도여행 패키지 (4인)	1박2일	4인	₩899,000
· 1박2일 해남도여행 패키지 (4인) + 숙박	1박2일	4인	₩1,099,000
· 해남도 관광	1박2일	4인	₩799,000
해남도여행 패키지	1박2일	4인	₩749,000
· 1박2일 해남도여행 패키지 (4인)	1박2일	4인	₩899,000
· 해남도 관광	1박2일	4인	₩749,000

문의: 062-515-1600